

Hansun Brief

발행일: 2018년 9월 12일(통권72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스위스 크립토 밸리에서 보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방향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목 차

1. 스위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업과 재단 몰려들기 시작
2.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새로운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시험 중
3. 스위스 크립토 밸리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가
4.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하여 규제 샌드박스 적용해야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요 약

스위스가 크립토 밸리로 성공한 이유는 세계적 수준 인재, 인프라, 중립성, 프라이버시 문화 등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공무원들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가장 큰 성공 요인이 경쟁력이다. 스위스는 법인세율이 낮고, 기업 규제가 적어 많은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비트코인 스위스, 이더리움 재단 등이 들어와 있다.

스위스의 공공 정책 또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친화적이다. 스위스연방철도(SBB)는 매표기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신분인증(디지털 ID)제도를 적극 도입하였다. 스위스 크립토 밸리는 대학, 협회, 연구실, 변호사, 회계사, 공공기관들이 네트워킹을 형성해 하나의 밸류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크립토 밸리 조성을 위하여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특구는 특정지역에 블록체인 친화적인 환경과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재정, 세제, R&D 및 공간 지원으로 블록체인 적용과 암호화폐의 제한적인 사용을 통하여 정책 방향의 테스트 베드가 되어야 한다. 최근 규제 혁신 법 가운데 하나인 지역 특구법을 수정·개정하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법에 신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 사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 혁신 성장 특구제도를 더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1. 스위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업과 재단 몰려들기 시작

2014년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스위스에 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주크시는 2017년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관련 세제와 법령을 마련하여 세계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비트코인의 사용을 공식 인정하였다. 암호화폐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채굴 장비 이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주크시는 스위스 내에서도 법인세율이 가장 낮고(8.6~14%) 기업 규제가 적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입주하여, 비트코인 스위스(Bitcoin Swiss AG), 이더리움 재단(Ethereum Foundation) 등 재단 설립자가 되었다. 비트코인 채굴기 ASIC칩 제조업체이자 전세계 채굴사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트메인(Bitmain) 또한 이곳에 지사를 설립하였다. 2018년 기준 암호화폐 거래소 셰이프시프트(Shape Shift), 비트코인 스타트업 자포(Xapo), 테로스(Tezos),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관리 플랫폼인 멜론포트(Melonport), 모네타(Monetas)등 170여 개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업과 재단이 몰려 일종의 파이프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프라이빗 뱅크(부유층의 자산 운용에 특화된 은행)인 팰콘 프라이빗 뱅크는 2017년 7월 스위스의 금융시장 감사국으로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 인가를 취득하였다. 스위스 온라인 은행인 스위스퀴트는 룩셈부르크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와 제휴하고 비트코인 투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공공정책의 역할이 컸다. 스위스의 국철인 스위스연방철도(SBB)는 매표기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주 정부도 규제를 풀어 주크시에 들어선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에 사용된 블록체인 디지털 인증기술을 기존의 정부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한 'e-정부' 사업 구상도 진행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신분인증

(디지털 ID)제도를 적극 도입하였다. 도서관 카드 없이 책을 빌리고, 시 자전거 대여(Stadtvelos)시 입금 없이 쉽게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주크시는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지난해부터 디지털 신분증명(digital ID)을 대학(루체른 응용과학대학교 IFZ Bucher 교수) 등에 컨설팅 받아 도입하고 있다.

스위스 자율규제는 관련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에 의해 중개자에 의한 제3자거래,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실명확인(KYC) 등에 대한 필수적인 규제만 하고 있다. 스위스 기업법 등 관련법은 많은 회사들에게 트러스트(trust), 파운데이션(foundation)을 만들고 특정 목적의 기금 운용에 자율을 부여하고 있다.

2.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새로운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시험 중

규제 샌드박스(sandbox)제도는 혁신적인 기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기관(FINMA)은 새로운 핀테크 사업을 허가하며 돈을 대여하지 않고 제3자의 기금을 받는 것에 한정된 기관에는 은행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핀테크(암호화폐 포함) 회사는 100만 스위스 프랑(CHF, 한화 11억 5,000여만원)까지 FINMA의 은행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 계좌를 보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 가능하다. 단, 자금세탁 방지(AML)규정은 준수해야 한다. 핀테크 기업이 관리하는 전체 펀드 규모는 1억CHF(1161억원)을 넘어선 안 된다. 새로 허가를 받는 기업은 수탁 받은 펀드의 최소 5%에 달하는 자본을 보유해야 하며, 30만CHF(3억원) 보다 작아선 안 된다.

2018년 2월 16일 스위스 연방금융감독청(FINMA)은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에 관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ICO를 준비하는 암호화폐를 지불형, 기능형, 자산형의 세 가

지로 규정하여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① 지불형(지불 용도로 쓰이는 암호화폐) ICO에는 현행의 자금세탁규정, ② 자산형(회사의 수익과 배당금 등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은 증권법을 적용, ③ 기능형(앱 등에서 각종 이용원이나 접근권 형태로 쓰이는 암호화폐)은 별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FINMA는 "암호화폐의 성격이 다양한 만큼 금융법이나 규제를 모든 ICO에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위스 정부는 연방금융감독청 가이드라인에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적시하는 등 그 목적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진흥에 두고 있다.

3. 스위스 크립토 밸리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가

스위스 시민이 관리하는 정치 체제는 중립적이고 안전하며 예측 가능하고 스위스의 지방분권화와 정치 문화는 미래의 암호화 기술 착근에 최적의 인프라이다. 법적 안전성, 예측 가능성, 지적 재산권 등의 강력한 전통이야말로 스위스가 지닌 강점이 아닐 수 없다. 스위스 금융 시장 규제 기관인 'FINMA'는 까다로운 규정보다 기본적으로 자율 규정을 장려하며 개선된 규정을 개발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접근도 쉽다.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현재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1인당 금 보유량이 가장 많고 1인당 GDP는 8만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 정책의 건전성과 강력한 경제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스위스는 유럽의 중심으로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고, 아프리카와 같은 시간대이자 미주와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뛰어난 항공, 철도, 도로 및 대양과 연결되며 모든 주요 무역 국

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세계 10대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중 3 곳이 스위스에 위치해 있으며 인프라, 안전, 건강관리, 교육, 기대수명 및 일과 삶의 균형에서 최고 순위에 있다. 스위스는 경쟁력과 생산성 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가 풍부하며, 최고 수준의 교육 기관이 다수이고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스위스는 세계적인 금융 허브이자 수백 개의 다국적 기업의 본거지가 될 정도로 우수한 국내 및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유연한 노동법, 낮은 관료주의의 벽, 정교하고 신뢰 받는 법률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부패정도는 낮고, 투자 자본의 유입 가능성과 서비스 수준이 높다. 특히 법인세율(14.6%)이 낮고 BTC거래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많은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2017년 전 세계에서 진행된 ICO 중 40%가 스위스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친화적인 스위스의 정책 및 크립토 밸리의 영향이 크다. 추후 크립토 밸리가 확대됨에 따라서 스위스에서 진행되는 ICO 규모 또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스위스에 암호화폐로 들어오는 자본의 규모 확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추후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허브로서 발전과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서 활용함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블록체인 기반 'E-Government' 사업과 같은 정부정책에 의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예상된다. 200~300개의 일자리 창출,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에서 2,000개 이상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4.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하여 규제 샌드박스 적용해야

현재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공개를 통한 자금 모집(ICO)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기술 유출과 국부 유

출이 초래되고 또한 블록체인 창업 생태계 조성이 되고 있지 않아서 4차 산업 혁명에서 뒤쳐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기반인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켜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야 한다.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능한 지역에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 친화적인 하향식(top-down) 국가 시스템을 비즈니스 친화적인 상향식(bottom-up) 국가 시스템으로 개조해야 한다. 국내기업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창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규제를 통해 ICO를 막기보다 ICO로 산업과 기업들의 혁신을 유도하고 부작용은 별도의 대책으로 방지해야 한다.

블록체인 특구는 특정지역에 블록체인 친화적인 환경과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재정, 세제, R&D 및 공간 지원으로 블록체인 적용과 암호화폐의 제한적인 사용으로 정책 방향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규제 혁신 법 가운데 하나인 지역 특구법을 수정 개정하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법에 신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 사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 혁신 성장 특구제도를 더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중앙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며 허용 되는 특구 내 기업의 사업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설립된 지역 특구에는 정부 주도의 진흥 정책은 지양하고 관련 업체의 협의체와 자율적인 생태계 조성으로 상향식(bottom-up)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적합하다. 블록체인 특구는 공공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극 도입하고 지역 화폐 개발과 암호 화폐 유통 지원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확충과 ICO와 가상화폐 거래소 유치 및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